

## 대통령 후보께 보내는 편지(2)

숙명여자대학교 법대 교수·변호사 성 민 섭

안녕하세요. 세 분 후보님.

12월 19일로 예정된 제18대 대통령선거일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해오셨지만 앞으로 남은 기간도 끝까지 최선을 다하셔서 후회 없는 선거를 치르시기 바랍니다.

요사이 경제민주화와 경제정의가 대선을 앞둔 최고의 화두인 것 같습니다. 우리사회의 빈부격차가 도를 넘었고 서민들의 삶이 그만큼 어려워졌기 때문이겠지요. 많은 해법이 제시되고는 있습니다만 단기간 내에 해결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 문제는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정의와 형평'에 관한 국민들의 인식과 제도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우리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성별과 연령 혹은 사회적 신분·계층과 무관하게, 누구에게나 실질적으로 공평한 기회가 주어지고, 누구든지 오직 자기 자신의 실력만으로 공정하게 평가받아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중장기적 방안이 마련되고 제도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세 분 후보님께 위 중장기적 방안의 하나로서 사법시험과 로스쿨, 즉 법조인력 양성제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주제를 단순한 법률산업의 문제로 보고 시장논리에 입각해서 처리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효율성을 앞세운 시장논리가 지배하면 그보다 더 소중한 규범적 가치가 훼손되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법의 영역이 그렇습니다. 법조인력 양성제도가 시장논리만으로 설계되고 법조제도 그렇게 운영된다면 술수가 뛰어난 법률기술자들은 넘쳐나겠지만, 경제민주화와 경제정의 구현 및 법치주의 실현에 앞장서는 올바른 법조인들은 점차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제도는 사람과 사회가 만들거나 고치면 그만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역으로 그 제도에 의해 사람과 사회도 영향을 받고 변화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법조인력 양성제도는 그 어떤 제도보다도 정의와 형평의 관념에 맞게 설계되고 공정하

게 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 분 후보님은 먼저 이 점을 충분히 고려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저는 세 분 후보님께 현행 로스쿨 제도의 향방과 무관하게 사법시험 제도는 계속 유지되어야 함을 간곡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현행 로스쿨 제도의 위헌적 요소나 파행적 법학교육의 현실도 심각합니다만, 굳이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 사정이 아니더라도 사법시험 제도가 계속 유지되어야 할 이유 내지 당위성은 너무나 충분하니까요.

저는 기회의 균등 내지 형평성 보장 차원에서의 당위성을 특히 강조하고 싶습니다. 국민 누구에게나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기회가 공평하게 주어져야 한다는 것. 특히 사회·경제적 취약계층도 오직 자신의 능력만으로 그 꿈을 이룰 수 있어야 한다는 것.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닌가요? 굳이 법조인이 아니라 그 무엇이더라도, 자신의 성별과 연령, 사회적 신분이나 계층과 무관하게 오직 실력만으로 공정하게 경쟁해서 성취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건 너무나 당연해서, 이 점을 강조하면 오히려 이상하게 들릴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너무나 당연한 이유를 강조해가면서 사법시험 폐지를 반대해야 하는,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 우리들의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지난 10월 26일 법무부는 사법시험 선발인원을 2014년 200명, 2015년 150명, 2016년 100명으로 단계적으로 축소한 후, 2017년 50명 선발을 마지막으로 사법시험을 폐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저는, 지난 2007년 7월 참여정부 말 어수선한 정치적 상황 속에서 여야간의 정치적 야합으로 현행 로스쿨 제도가 기습적으로 도입된 것과 비슷한 상황이 현재 전개되고 있음을 매우 근심스럽게 생각합니다. 국민들과 언론의 관심이 대선에 집중되어 있음을 기회로, 꼼꼼히 들여다보면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잘못된 정책을 슬그머니 관철시키려는 의도가 엿보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세 분 후보님께 이 글을 드리는 이유도 이 문제를 그런 식으로 어쩔쩔 넘어가시면 안된다는 점을 각인시켜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어쨌든 법무부의 발표대로라면, 2017년 이후 법조인이 되려는 자는 대학 졸업 후 로스쿨까지 최소 7년이 넘는 정규교육과정을 마쳐야 합니다. 세 분

후보님 모두 대학등록금이 지나치게 비싸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고 반값등록금을 공약으로 내놓으셨지요? 그런데 그렇게 비싼 등록금을 4년 이상 내고 대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다시 그보다 배 이상 비싼 비용을 부담하고 3년 이상 로스쿨을 다녀야 법조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로스쿨은 졸업 때까지 등록금과 학비 등 직접비용만 1억원 넘어 든다고 하니, 가난한 서민들은 언감생심 법조인을 꿈꾸기 어려울테고 어지간한 중산층들도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실제로 사법시험과 로스쿨이 병존한 첫 3년간의 통계를 보면 이는 결코 기우가 아님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모 일간지가 2009년~2011년 로스쿨 입학생 5,074명을 상대로 거주지 정보를 조사했더니 전체 재학생의 61.4 퍼센트가 서울에 거주지를 두고 있더라합니다. 사법시험을 통해 배출된 법조인 8,115명을 상대로 분석했을 때 서울 출신이 18.7퍼센트에 불과한 것과 비교하면 로스쿨 재학생의 서울 출신 비율이 3.2배 이상 높은 수치이지요. 게다가 이 중 소위 부촌으로 알려진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 거주 비율은 27.2 퍼센트에 달했지만 주민들의 소득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알려진 금천(0.6퍼센트)·도봉(1.3퍼센트)·중랑(1.0 퍼센트)구에는 수십 명 정도만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니 그 불균형의 정도가 이미 심각하다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보면 현행 로스쿨 제도에 대해 ‘그들만의 리그’니 ‘현대판 음서제도’니 하는 비판이 쏟아지는 것도 그만한 사정이 있었다는 생각도 듭니다.

“(사회)계층은 교육을 통해 유전된다.” 제가 대학신입생 시절 사회학 수업 시간에 처음 들었고, 그 후 30여년을 살면서 상당 부분 공감하는 말입니다. 저는 외무고시를 폐지하고 국립외교원 제도를 도입하여 외교관을 양성하는 정책, 로스쿨 제도를 도입하고 사법시험을 폐지하려는 정책 등 과거 개천에서 용을 배출했던 고시제도에 대한 큰 변화가 혹시 교육을 통한 계층유전과 어떤 관련이 있지 않나 의구심이 듭니다. 우리 사회에서 갈수록 ‘공정한 사회’나 ‘기회균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이유는, 이미 계층유전 및 고착화가 상당 수준까지 진행되었고 그 정도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또 이러한 계층유전 및 고착화 현상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우리 사회의 분열은 더욱 가속화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세 분 후보님이 이번 대선을 앞두고 한목소리로 ‘경제민주화’와 ‘경제정의 실현’을 강조하고 계신 이유도 그런 인식에서 비롯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법시험 등 법조인력 양성제도는 경제민주화나 경제정의와 결코 무관한 것이 아니며, 오히려 그 근간을 이루는 인적·제도적 인프라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 10월 24일 문재인 후보님이 사법시험 존치에 대해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히셨다는 것 외에 다른 후보님이 이 주제에 대해 무슨 말씀을 어떻게 하셨다는 소식은 듣지 못하였습니다. 그나마 문 후보님도 무슨 합리적 근거에 기초한 반대가 아니라 "이제 로스쿨 제도가 도입된 이상 경과기간을 지나고 나면 로스쿨 쪽으로 법조인의 충원 창구를 일원화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라고 하셨다니 참으로 실망스럽습니다. 어떤 제도든 국가의 정책목표를 위해, 궁극적으로는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제도를 위해 국민이 희생되어도 할 수 없다는 논리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물론 문 후보님도 그런 취지로 말씀하셨을 리는 없겠지요. 그렇다면, 설마 당신과 무관하지 않은 참여정부의 작품(?)이니 무조건 이대로 갈 수밖에 없다는 생각에서 하신 말씀인가요? 문 후보님 정도 되시는 분이 그러실 거라 믿고 싶지는 않습니다. 아마도 법조인 출신이신 문 후보님조차 이 주제에 대해 깊게 생각하신 적이 없기 때문이겠지요. 그렇지 않고서야 사법시험 제도가 아니었다면 그 자리까지 가실 수도 없었을 문 후보님께서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박근혜, 안철수 두 분 후보님은 어떠신가요? 아직까지 이 주제에 대해서는 아무 말씀이 없으신데, 혹시 신중한 검토가 없으셨던 것 아닌가요?

세 분 후보님께 부탁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린 사법시험 존치 등 법조인력 양성제도에 대해 보다 진지하고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시시오. 법무부나 대법원 등의 관료적이고 편향적인 의견만 듣지 마시고 법학교육 현장에서 온 몸으로 이 문제를 접하는 법과대학교수들과 학생들, 그리고 법조인의 꿈을 안고 고시촌에서 밤을 밝히는 고시생들의 의견까지도 충분히 들어주시시오. 그리고 대통령 선거일 이전에 국민들 앞에 이 주제에 대한 분명한 결론과 해법을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분 후보님께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